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

중견기업 핵심 정책과제

2023. 5.

목 차

R&D·투자 촉진 및 세제 지원 확대

1.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1
2.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2
3.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 4
4.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6
5. 지방투자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
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9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7. 상속세율 인하 11
8.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12
9.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14

노동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15
11.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17
12.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18
13.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19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20

목 차

지속가능경영 지원

1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21
16.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규제 완화	23
17.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4
18.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25
19.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27
2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28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일화 추세
 -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
 - * 최고세율('11년→'21년, 지방세 포함) : OECD 평균 25.4% → 23.2%, G7평균 32.8% → 26.7%, 한국 24.2% → 27.5%(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조세수첩)
 - 법인세 과세 시 OECD 35개국이 단일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2개, 룩셈부르크 3개 구간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만 4개 구간 적용
- 한국은 '18년부터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25%)하고 '23년부터 24%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역행
 - *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구간별 1%씩 인하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7%에 비해 한국은 3.4%로 높은 수준
 - *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 2.3%, 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 법인세 부담 증가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자본 유출을 초래
 - * 해외직접투자(기재부) : '17년 450.2억 달러 → '21년 758.7억 달러(308.5억 달러 증가)
-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독려 필요

□ 건의내용

-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 인하
 -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0%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0~2%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수준('20년)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1%*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 : 한국 79.1%, 미국 73.9%, 일본 79.2%, 독일 68.9%, 프랑스 65.8%, 영국 66.6%, 중국 7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 평균 신규 채용 추이 : ('16년) 23.2조원/56.8명 → ('18년) 24.2조원/40.4명 → ('20년) 19.0조원/46.2명 → ('22년 계획) 14.5조원/34.4명(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78,171	81,106

* 중견기업 기본통계

-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차 15% → 중견 4~5년차 10% → 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18.0%)보다 높은 수준

* 회귀 검토요인 : 조세지원 축소 58.0%, 금융지원 축소 15.4%, 판로 제한 14.8% 順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건의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1안)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전체 기업 25%

- (2안) 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 범위 : (現)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案) 2조원 미만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 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1%)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2개사(7.9%)(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원	11.1%	249억원	4.4%	4,751억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원	72.4%	2,228억원	8.1%	5,377억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 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4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2배 한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50, 중견40, 그 외 25	10(12)	5(7)	1(3)	3(1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코스닥)	20~30	-	12(18)	6(10)	3(6)	3(1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25	15	15	4(10)
중견 적용범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3년 1년간 한시 적용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

□ 건의내용

- R&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역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 마련 중(국정과제 115)

◆ '23.5월 현재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121877)」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을 비롯한 노동력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구직난이, 지방에서는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49.3%, 전체 종사자의 52.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사업체 / 종사자 비율(%) : ('15년) 48.4% / 51.7% → ('20년) 49.3% / 52.3%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22.6.28)

-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역 고용 및 소비 촉진, 생산 유발, 인구 유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음

- 세수 측면에서도 지자체는 법인지방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지방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방 이전 등 지방투자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지방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을 유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마련 필요

□ 건의내용

- 지방투자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예 : 법인세 및 소득세 차등 적용
-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소급 적용
 - * 예 : 투자금액이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이전 기업 등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회 조속 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혁신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은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부·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혁신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이하 시범구매) 사업 운영 중

* 혁신제품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우수연구개발제품(FT1), 혁신시제품(FT2), 기술혁신인정제품(FT3)으로 구성

- 그러나, 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도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

<현장 애로 사례>

- ▶ A사는 세계 최초 침대부착형 뇌 수술용 의료로봇을 개발하여 '21년 제3차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되었으나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용화 및 판로 개척에 애로

-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이제 막 중소기업을 벗어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자체적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

* 중견기업의 약 89.4%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기본통계)

- 상위법령인 조달사업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규칙으로 시범구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며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중견기업 혁신제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나,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견기업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

-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시장에서의 Track Record가 필요하나, 중견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수출 애로가 더욱 심화

☐ 건의내용

-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1년 상속세수는 6조 9,447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원(%)) : ('11) 12,586(0.7) → ('16) 19,949(0.9) → ('21) 69,447(1.9)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건의내용

-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096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1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및 공제한도(최대 6백억 원 → 최대 1천억 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600억원 한도*로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액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기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애로

상속세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중견기업은 과세특례 한도 확대에도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우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이로 인한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예시> 1천억 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 증여세 부담 세액 : 307.4억 원

* 특례한도(600억원) 세액 : 6억 원(60억 원 이하 10%) + 106억 원(60억 원 초과분 20%)
특례 한도 초과분(400억 원) 세액: 195.4억 원(10~50% 누진세율)

• 5년간 연부연납 시 매년 61.5억 원 납부(거치기간 없음)

*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

□ 건의내용

- 안정적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동일한 수준(최대 20년)으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매년 노조 파업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으로 근로 손실과 생산 차질로 인해 기업의 피해 증가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노사분규건수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근로손실일수(천일)	638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471	343

* 출처 : e-나라지표

-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분야는 141개 국가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 (WEF, 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19.10월)

- 외투법인은 국내투자 애로요인*으로 노사관계를 1순위로 응답

* 노사관계 34.8%, 경영환경 24.6%, 임금수준 24.6%, 정부규제 21.7%, 정치적 안정성 13% 順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19.10월)

- 게다가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이 '2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더욱 심화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 해고자·실업자까지 노조활동이 가능해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장 불법 점거 등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 우려

-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대해 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방어권 보장

<주요국의 노조 단결권에 대한 방어권 비교>

구 분	주요 내용
미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근로조건 향상 위한 파업시 영구 대체 가능)
독 일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일부 허용(파업불참자·도급 등)
프랑스	직장점거 원칙 금지(예외 허용), 대체근로 가능(파견·기간제 근로자 대체 금지)
영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파견 제외)
일 본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영구 대체 불가)
한 국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 건의내용

-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조성을 위해 노사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및 직장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
 -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금지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명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주52시간제 시행 후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도입요건이 까다로우며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경영 부담 가중

*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연구개발업무)),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돌발수습·업무량 폭증 등 추가) 및 기간 확대(연 90일), 사업장 단위 인가

- 또한 직무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 발생
 - 계절적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
 - 다품목·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나 획일적 규제로 R&D·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되어 경쟁력 약화
-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건의내용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1년),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연구개발업무 3개월)→6개월)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개선(사업장 → 근로자)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으로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에 막대한 부담 가중

*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책임 5배,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벌금부과(사망 50억원 이하, 상해 10억원 이하)) 등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기업경영 공백을 야기하고 생산·투자 차질 유발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온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킴

* 사망사고 시 처벌 수위 : 【영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 【독일】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천 유로(약 6,100만 원) 벌금, 【미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불(약 1,100만 원) 이하 벌금, 【일본】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엔(약 1천만 원) 이하 벌금(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21.12월)

□ 건의내용

-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산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계류 중

* 주요내용 :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배상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 노조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 또는 장기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업체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권 침해 우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권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조의 무분별한 쟁의 발생 우려
- (손해배상책임 제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별 책임 범위 입증에 사실상 불가능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그 피해는 사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 훼손, 국내 투자 기피 및 해외 이전, 국내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우려

□ 건의내용

-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였으나, '21.9월부터 참여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됨

* 대상 : ('16년) 중소, 중견 → ('20년) 중소, 중견(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21.9월) 중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확보에 상당한 기여

-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보다 약 30%p 높음

* 가입 현황(가입청년 수/가입기업 수) : ('16년) 5,217명/2,788개 → ('17년) 40,170명/18,268개 → ('18년) 106,402명/39,365개 → ('19년) 98,572명/41,255개 → ('20년) 137,226명/54,376개 → ('21.7월) 91,749명/42,095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8월)

** 석·박사 가입 수 : ('16년) 74명, ('17년) 1,480명, ('18년) 4,326명, ('19년) 3,709명 (한국노동연구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태 분석, '20.2월)

- 중견기업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여전히 채용 애로를 겪고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외로 중견기업 인력확보 애로 가중 우려

* 신규채용 애로 요인 : 적합한 인재 부재 47.4%,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 17.9%, 지방 소재 16.1% 順 (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新외감법 개정('17.10월 개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주기적 지정제 :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정부가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6년 자유 선임 후 3년간 정부 지정)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19년 220개사에서 '22년 677개사로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전체	상장기업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기업
2019	220	220	134	86	-
2020	462	434	163	271	28
2021	674	593	265	328	81
2022	677	531	219	312	146

* 자료 : 금융감독원

-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부담 가중
 - 신외감법 전·후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17년 1.01억원에서 '21년 2.56억원으로 약 155%, 감사시간은 1,416시간에서 2,531시간으로 79% 증가
- * 감사보수(백만원) : '17년 100.7 → '18년 118.8 → '19년 146.0 → '20년 197.2 → '21년 256.4
 감사시간(시간) : '17년 1,416 → '18년 1,602 → '19년 1,796 → '20년 2,113 → '21년 2,531
- 금융감독원의 감사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19년~'20년 11.5건에서 '21년 13.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일부 역량이 부족한 회계법인은 책임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 가중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음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주체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없음	존재 (10~20년)	없음	없음	없음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없음				있음

*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1.10월

□ 건의내용

-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예 : 6년간 자유 선임 후 3년간 외부감사인 교체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목으로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을 요건** 강화

* 자산총액 기준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16.9월)

**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을 상장 20%→30%, 비상장 40%→50% 상향('20.12월)

- 지주회사 설립 및 지분을 요건은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작용해 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함
 - 지주회사 설립요건인 자산기준 강화 이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수는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수는 감소

<일반지주회사 현황>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일반지주회사	92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158
대기업집단	26	28	30	30	29	19	39	34	37	41	44	47
중견·중소	56	75	84	87	111	133	144	130	126	116	110	111

*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함

-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그간의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어 정책 일관성 결여
 -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04년) 손자회사 허용, ('07년) 부채비율 완화(100%→200%), 증손회사 보유 허용, 자·손자·증손회사 간 사업 관련성 규제 폐지
-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사전적 규제는 없고 시장독점 등 사후적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02년에 사전규제 폐지

□ 건의내용

-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을 완화하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을 하향(상장 30%→20% 비상장 50%→40%)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
-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유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 한계
 - * (사례) 비산재 등 산업부산물을 탄소포집활용(CCU) 기술로 처리하여 생산한 탄산화물 등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 어려움

□ 건의내용

-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 중

순환자원 인정기준(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안), '17.12월)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 실제로 순환자원 인정건수(465건) 중 왕겨 및 쌀겨(259건), 폐지류(115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37건), 폐금속류(24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

* 그 외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 식물성잔재물 13, 폐유리류 6, 무기성오니류 3, 분진류 3, 폐석고·폐석회 2, 폐목재류 1, 폐섬유류 1, 광재류 0, 폐사료 0(순환자원정보센터, '22.9.20 기준)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폐기물	용도	폐기물	용도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2. 탈황석고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사료 원료

* 출처 :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2.6월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건의내용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되는 경우 포함

- (2안) 유가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

- 유상거래 실적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 후 6개월 이내 실적을 제출허용
-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배출 등 환경 문제와 안전·보건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 또한 투자회사가 ESG 경영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SG에 소극적인 기업은 향후 투자 및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년 블랙록은 전년 대비 ESG경영에 대한 주주관여가 대폭 증가(환경(E) 289%, 사회(S) 146%, 지배구조(G) 46% 증가(삼정KPMG, 삼정 인사이트 Vol.74, '21.2월)

- 중견·중소기업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자본 등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

*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37.6%), 공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표준 마련(32.7%), ESG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견련, ESG 경영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1.6월)

-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ESG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컨설팅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책 필요

□ 건의내용

- 환경·안전 등 ESG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제지원
 - ESG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중소 10%, 중견 7%, 대 3%
-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를 소비하는 경제주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3.7% 수준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 부담금 요율 : ('01년) 3.13% → ('02년) 4.591% → ('05년) 3.7%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4년 3.1조원에서 '21년 6.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3년에는 4.7조원에 이를 예정
- '14년 1.9조원이던 법정부담금은 '23년 약 2.6조원에 이를 전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재원규모>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획)
법정 부담금	19,471	21,440	20,354	20,396	21,107	21,830	22,229	22,591	20,082	25,894
재원 규모	30,828	35,986	35,051	35,879	33,275	38,168	49,696	63,940	62,324	46,961

* 출처 :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계획

-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또한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
-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많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전기요금은 인상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은 인하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 국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